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 4.9.(목)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목)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교수(전북대)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하여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